

보도시점 2026. 4. 23.(목) 16:30 / 배포 2026. 4. 23.(목) 08:30

# 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 암표근절 노력 당부

-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의견 청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월 23일(목)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 < 행사 개요 >

- 일시 : 2026. 4. 23.(목) 15:30
- 장소 : 엘타워 오페라홀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주요 참석자  
(공정위)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정책국장 등  
(업 계)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 임원 5인  
(네이버,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티켓베이, 이상 가나다순)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시행(7.21.)에 앞서, 개정된 개인 간 거래(C2C 거래) 규율체계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업체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 개인 간 거래 관련 개정 전자상거래법 주요 내용 】

- 기존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거래) 위주로 설계되어 개인 간 거래(C2C 거래)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 법률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줄이고 플랫폼의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
- 개인 간 거래(C2C 거래)를 통신판매로 규정하여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 거래 상대방은 소비자로 법적 성격을 명확화

- 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 판매자의 정보에서 성명**을 삭제
- 거래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개인 판매자의 **정보 및 거래내역**을 **법원·분쟁조정기구 등에 제공할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
-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중 **개인과 사업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 등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남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개인 간 거래에서의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남 부위원장은 범부처적으로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업계 스스로도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고거래 플랫폼 대표들 또한 법 준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다양한 거래 주체와 거래 조건이 혼재하는 중고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남 부위원장은 향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새로운 제도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고거래 분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향후 공정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 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이어나가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안전한 소비환경과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말씀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 동 훈 (044-200-4445)
		담당자	사무관 백 승 근 (044-200-4449)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말씀**

보도일시 : 2026. 4. 23.(목) 16:30



---

# 모 두 말 씀

-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 -

- 일 시 : 2026. 4. 23.(목) 15:30
- 장 소 : 엘타워 오페라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 동 일**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중고거래 업계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비자가 판매와 거래의 주체자 되는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의 중고거래가 단순히  
물건을 아껴 쓰는 차원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중고거래는 플랫폼과 결합하여  
'자원 순환'과 '친환경 소비'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인 거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이처럼 거대해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이 기울여야 할 책임과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분쟁 발생시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도록 하였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정보 제공도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소비자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방해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고 있는 업계 여러분의 자발적 개선이  
함께 있을 때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업계 관계자분들께  
개정된 법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느끼시는  
제도적 보완점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보호 노력을 하고 계시는 만큼,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하려 해도  
근거법률이나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러분과 함께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중한 의견들은  
향후 정책 추진 및 지침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